

인간주의 - 지구문명의 여명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참가학회) 회장

2002년 1월 26일

‘자기규율’이야말로 21세기의 초석

악을 허락하지 않는 정신과 진정한 ‘대화’의 복권(復權)을

21세기 첫 해였던 지난해는 ‘전쟁과 폭력의 20세기’에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제일보를 내딛으려고 한 인류에게 지극히 중대한 질문을 던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을 덮친 ‘9·11’로 불리는 동시다발테러사건이었습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존귀한 인명을, 무너져 내리는 초고층빌딩의 잿더미 속에 무참하게 묻어버린 전례 없는 테러 행위는 어떠한 대의 명분을 내세워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엔이 ‘문명 간 대화의 해’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과 공생의 정신에 근거한 대화와 완전히 대극(對極)하는 테러가 세계를 뒤흔든 일은 너무나 씁쓸한 비극이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혔음에도 범행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익명성, 그 비열함은 인간으로서의 심부(深部)를 위협하는 악마와 같은 행위입니다. 실로 ‘문명 간의 대화’를 표방하는 세계에 대한 일찍이 없었던 도전이고 모욕이며 유린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어난, 테러라는 용서하기 어려운 비인도적인 범죄가 세계 사람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아서 슈레신저 씨는 9·11 이후의 미국을 “불안과 고민이 가득한 사회”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날을 경계로 ‘세계는 일변했다’고 보는 식자는 아주 많습니다.

(일본인)피해자가 24명이나 나오면서, 신기할 정도로 당사자 의식이 약하다는 일본에도 불안감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탑과 같은 고층빌딩의 붕괴와 탄저균 테러가 초래한 사회 혼란을 ‘묵시록’에 비유하는 소리도 있을 만큼 우울한 밀레니엄<새 천년>의 분위기가 미국뿐 아니라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한 군사행동으로 사태는 일단 종식을 보았지만, 이번 테러가 사회에 남긴 상처는 경제적인 타격을 포함하여 너무나 큼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러의 여파로 시대가 암전(暗轉)해 버리면 이것이야말로 테러리스트가 바라는 대로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테러의 큰 목적이 사람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공포와 불신감을 선동하는 데 있는 이상, 그 위협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능가하는 ‘인간정신의 힘’을 끄집어내는 것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테러대책의 관점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시대의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비극에서 일어나 그것을 정면에서 똑바로 보고 시대변혁의 ‘최대 찬스’로 전환하는 여부는 어디까지나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인간이란 신앙과 꿰어오르는 용기가 있으면 어떤 곤란한 기도(企圖)도 정복하는 법이다”라고 괴테가 말한 것처럼 얼굴을 들고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 곤란한 과제에 도전해 갔으면 하고 염원해 마지않습니다.

‘문명 간 대화의 해’를 암전시켜 버리고 만 흉악 범죄. 그것을 ‘문명 충돌’, ‘문명간 전쟁’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만들지 않기 위해, 테러를 끝까지 범죄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도 본래 테러가 ‘범죄’로서 ‘처벌’되어야 할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벌’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므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혹은 ‘씩’일 때 잘라 내기 위한 국제법, 국제경찰 등의 측면도 병행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런 제도 만들기과 예방적인 조치를 병행하여 발본요법(拔本療法: 근본원인을 뽑아 치료하는 방법. 편집자주)도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테러를 낳는 토양과 배경이 여러 가지로 지적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부흥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기구도 드디어 만들려고 하여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고뇌

저는 여기서 그런 여러 문제들의 근본을 가로막고 있는 아프리아<난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눈을 돌리는 것부터 해 보고자 합니다.

즉, 언어도단의 광신(狂信)적인 테러에 어떻게 맞서면 좋을지, 익명성의 장막에 숨은 그들과 교섭은 고사하고, ‘대화와 유화(宥和)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난문은 아직도 세계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세계 평화를 위해 공헌해 온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조차 견해를 달리하고 있음이 상징하듯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노르웨이에서 노벨평화상의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최대 초점이 된 것은 테러의 대항조치로 취했던 군사행동에 대한 시비(是非)였습니다. 참가한 수상자들은, 군사행동만으로 테러를 근절할 수 없다는 인식에는 일치를 보았지만 군사행동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의견은 크게 나뉘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싸우는 높은 뜻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도 생겨버린 틈 – 그 틈을 강한 인내력으로 채우고 극복해 가는 작업 없이 ‘평화로운 21세기’는 정말로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도단인 테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세계 양식인들의 무거운 질문

인정사정없는 냉혹한 ‘악’에 직면했을 때 ‘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싸우면 좋은가 – 인간의 양심과 선성(善性)을 믿는 사람일수록 그 곤혹, 딜레마, 무력감, 몸부림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괴로운 심성이 어둠처럼 덮쳐오는 것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소년 시절, 한때 나치스의 강제수용소라는 ‘지옥’을 빠져 나와 문필업을 해 온 엘리 바이젤 씨는 문인다운 표현을 구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강하다. 그러나 폭력에는 무력하다. 기관총 한 자루를 가진 테러리스트는 시인 100명, 철학자 100명보다 강하다. 테러리스트는 그것을 증명했다.”

‘정신은 강하다. 그러나 폭력에는 무력하다’ – 이 말은 물론 반어고 역설입니다.

바이젤 씨는 나치스라는 냉혹하기 그지없는 폭력에 시달렸지만 인간의 정신력을 믿고 평화에 대한 희구를 펜에 위탁해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번 미국의 무력행사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곤혹과 딜레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테러의 온상이라고 불리는 제3세계의 빈곤문제에도 깊은 이해를 나타내는 인도출신의 캠브리지대학교 교수 아미르티아 센(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씨는 학자다운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

니다.

“무력행사만을 보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9월 11일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응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벌이 없으면 테러가 계속될 것이므로”라고.

‘어떤 방법으로든’, ‘벌이 없으면’ 등이라는 이 문맥에서 ‘무력’과 ‘보복’이란 말은 신중하게 피하면서 역시 ‘응수’의 필연성이 강조되어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잘 억제된 말투는 오히려 당면한 테러에 대한 대응이라는 과제의 거대함과 곤란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보복’을 근절하는 어려움

거기에 현대라는 시대를 에워싼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 칙흑과 같은 어둠을 통해 새벽을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신력을 필요로 합니다.

“보복은 보복을 부른다”라고 자주 말했듯이 보복이 결코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엄청난 피의 대가로 얻은 인류의 업이라고 할 경험칙(經驗則: 이론이 아니고 측정과 관찰에서 얻은 법칙. 편집 자주)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칙의 곤란 극복이란, 동서고금의 《몽테 크리스토 백작》이나 《주신구라(忠臣藏)》¹처럼 ‘복수담(원수를 갚는 이야기)’의 변하지 않는 인기에서 나타나듯이, 방관자 특유의 방식과 결별하여 당사자 의식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무거운 과제로 다가오는가. 경솔하게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전혀 와 닿지 않는 슬로건, 실없는 말이 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 주어진 숙제는 너무나 무겁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 성경에 쓰여 있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있듯이 ‘보복 논리’에서 ‘사랑의 논리’로 바뀌는 대전환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가 “악에 저항하지 말라”고 우직하리만큼 강렬하게 주장한 것에 대해 레닌이 다소 빛나간 비난

¹ 주신구라(忠臣藏)

일본의 역사 소설. 자신의 군주를 죽인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하여 일단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다가 후에 일격을 가해 원수를 갚는다는 내용.

²을 격렬하게 했지만, 그 사상은 철저한 비폭력이라는 연마된 윤리규범이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 번은 그렇게 무겁고 절박한 질문에 직면하거나 혹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무차별 테러로 보는 ‘인간부재’의 병리

타인의 고통·고뇌에 대한 ‘상상력’이 결여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폭력을 방지하는 생명관 확립을

딜레마를 막아내는 ‘통각(痛覺)’

연쇄적인 악의 몽매함이라 말한다면, 즉 당하면 갚는다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정념(情念)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톨스토이가 실로 그랬듯이 혼의 깊은 곳에 있는 고뇌와 갈등, 회한과 회심의 드라마를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고발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이번 무차별테러에 직면하여 마음속에 강하게 새겨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한 혼을 풀이고 찢는 듯한 절박한 고뇌의 선택을 여지없이 하게 된 폐부를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테러도 보복도, 이지메와 가정 내 폭력 등의 작은 폭력에서 전쟁이라는 큰 폭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폭력에는 인간존엄을 걸고 반대입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무력행사를 비난하고 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처참한 상호 증오의 심연(深淵) 앞에서 꼼짝없이 폭력의 거대한 격류에 먹혀 버릴지도 모릅니다.

평화가 전쟁과 전쟁의 막간극밖에 되지 않았던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마땅히 있어야 할 원점을 구하며,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의 전 생명을 걸고 자기 자신을 새로 만들<인간혁명의 뜻> 정도의 각오와 긴장, 실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유네스코헌장이 말하는 마음속의 단호한 ‘평화 요새’의 구축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만인에게 던질 만큼 이번 테러의 충격은 컸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집어삼키면서 붕괴해 가는 쌍둥이 빌딩의 자욱한 재와 먼지의 배후에 떠오른 것은 실

² 레닌에 의한 톨스토이 비판

레닌이 ‘러시아혁명의 거울로서 레오 톨스토이’라는 논술에서 한 비판. 거기에서 레닌은 톨스토이의 사상이란 차원을 달리한 전략적 관점에서 그가 설한 ‘악에 대한 무저항’이 러시아 황제의 압정을 허락하고 조장하고 말았다고 지탄하고 있다.

로 황량한 심상<이미지>풍경이고 선한 것, 가치 있는 것, 위대한 것은 무엇 하나 만들어 내지 못하는 불모의 정신풍토였습니다.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거기에 ‘인간’이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정 러시아 말기의 한 무리의 테러리스트들을 ‘상냥한 살해자들’³이라고 부른 알베르트 카뮈는 그들의 심리를 “살해란 필연적이지만 그들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이지만 용서할 수 없다’ - 인간인 이상 피할 수 없는 모순, 딜레마를 정면에서 막아내는 이 통각, 생명감각입니다. 그것이 억제력이 되어 테러라는 구제불능의 행위에 어떤 종류의 구제(예를 들어 철없는 아이들이 동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군의 마차공격을 단념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통각, 생명감각을 동시다발테러의 실행범들이 조금이라도 공유하고 있었는지 어떤지, 자기도취가 아닌 자기규율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었는지 어떤지, 저는 의심합니다.

타인에 대한 눈빛이 결핍된 만행

사건 직후, 저는 모스크바대학교의 사도브니치 총장과 이 문제에 대해 약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서 총장이 “도덕성, 윤리감각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찬동하며 실로 그 ‘개인’이 말살되고 만 곳에 무차별테러의 병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리의 뿌리 부분에는 ‘타인성(他人性)’의 부재라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의식, 염두에는 ‘적’은 있어도 ‘타인’(이라는 개인)은 없습니다. 머리는 ‘적’이라는 비인칭적인 관념에 사로잡히고 말아 천차만별의 인상(人相) - 그들에게는 민간인과 군인의 구별조차 없다 - 을 가진 ‘타인’ 따위가 개재(介在)할 여지가 없습니다. 설사 있어도 덧없는 버추얼<가상>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괴로움과 슬픔, 고통, 한탄 등에는 완전히 불감증에 걸려 저런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라고.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인간부재’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끓어오르는 증오와 자기 도취만으로 인간 본래의 체온과 감축의 온기는 조금도 전해 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의 눈빛 속에서만 ‘자기’로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자타’의 혼의 투쟁을 통해 인간은 인간이 되어 간다 - 인간이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서, 말하자면 상식입니다.

³ 상냥한 살해자들

1905년 2월, 모스크바에서 사회혁명당에 속한 테러리스트의 한 무리가 러시아 황제의 숙부 세르게이 대공을 암살했다. 카뮈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희곡 《정의의 사람들》을 씀과 동시에 《반항적 인간》에서도 상세하게 논했다.

이 과정이 결여되면 인간은 언제까지나 자유분방하고 자기 도취에 빠진 유아성(幼兒性), 발육부전(發育不全)을 탈피할 수 없습니다. 칼 야스퍼스의 “우선 상대방을 인정하고 내면적으로 시험삼아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 반대하는 사람은 진리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는 사람보다 중요합니다”고 한 통찰에서는 거의 대극(對極)에 위치하고 있어 그러한 자기 도취는 증오와 폭력이 기생하고 증식해 가는 온상입니다.

테러리즘으로 응축된 ‘9·11’ 이후의 문명사회를 뒤덮고 있는 어둠을 응시할 때 거기에 어렴풋이 보이는 것은, ‘자기’도 ‘타인’도 윤곽이 뚜렷하지 않는 ‘인간부재’라는 현대의 악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심상풍경 속에서 대화의 실적을 올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대화는 ‘자기’ 속에 ‘타인’이 존재해야만 비로소 성립되는 것으로, ‘내적인 대화’는 ‘외적인 대화’가 가능해 지기 위한 빠뜨릴 수 없는 전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설은 모놀로그<독백>나 일방적인 자기주장으로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이러한 병리가 진행되면 언론은 폭력의 한 형태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악을 허락하지 않는 자세가 불가결

한편 이 ‘인간부재’라는 병리에서 보면 테러에 대한 대응에 고심하는 측도 ‘강 건너 불’로 보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테러를 용인할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것처럼 비열한 위협에 굴복하거나 타협한다면 오히려 악을 조장할 뿐이므로 단호한 대결의 자세야말로 테러근절의 대전제며 모종의 경우에는 어떤 대항조치가 필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공권을 장악하여 속행한 일방적이고 대규모적이며, 지속적인 공중폭격은 ‘대항조치’의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화근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확실히 탈레반 정권의 붕괴과정을 통해 명확해진 사실은 풍부한 자금력을 내세워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다는, 상상을 초월한 테러조직의 거대함이었습니다.

그 위협 앞에, 무력에 의한 대항조치를 일체 배제한 대응이 과연 가능했을까 – 이것은 전 세계가 어쩔 수 없이 직면한 과중하고 불가피한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잡하게 뒤얽힌 난제일수록 ‘고르디오스의 매듭’을 일도양단(一刀兩端)한 알렉산더 대왕의 검과 같은 해결책 등이 존재할 리 없으며 또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톨스토이적인 혼의 편력(遍歷)을 기축으로 한 정공법으로 맞서는 이외는 없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공중폭격의 ‘질’적인 측면입니다.

자기 편의 인적 손실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상대방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게다가 그 규모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상황이, ‘인간의 생사라는 근본적인 일에 대한 불감증을 향진(尙進)시키고 혼의 차원은 아주 멀리 버려 두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클러스터 폭탄<집속 폭탄>이나 디지 커터<살상용 파쇄성 폭탄> 등의 대형폭탄 사용은 이 불감증, ‘인간부재’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증진시킬 뿐입니다.

독일 장군 제크트의 회상

저는 고바야시 히데오 씨가 태평양전쟁 중에 남긴 “제크트의 ‘어느 군인의 사상’에 대해”라는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 중 제크트라는 독일 장군이 힌덴부르크(당시 8군사령관. 편집자주) 밑에서 유럽을 전전(轉戰)했을 때 그 감상을 적은 문장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본래는 용감한 러시아군이 조준이 정확한 우리 유탄포의 맹사격을 받아 몹시 당황하여 허둥대고 마치 공포에 질린 짐승들처럼 갈색 대군을 이루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주시한 나는, 오히려 그들이 이 지옥의 맹렬한 불 속에서 한시라도 빨리 피해 나갈 것을 바랄 정도였다. 우리라도 이 맹사격을 방어할 방법을 모를 것이다. 나는 승리를 해서 득의양양해야 할 때 오히려 인간정신의 이 비참한 패배를 보고는 소름이 끼쳐 망연히 서 있었다”라고.

고바야시 씨는 제크트가 보고 있었던 것은 ‘참을 수 없는 전쟁의 타락’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러시아군과 마찬가지로 탈레반과 알 카에다 병사도 맹위를 떨치는 최신무기에 어찌할 도리가 없어 도망치려고 우왕좌왕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지 않는, 아마 배려조차 하지 않을 현대전투에서 제크트가 말하는 ‘인간정신의 이 비참한 패배’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상상력이라고 할까, 통각·생명감각을 공유할 수 있었는지 어떤지.

전투요원에 한하지 않습니다. 새해, 텔레비전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경 없는 의사단’의 한 사람이 “정치가는 자신들이 이끈 결과와 먼 곳에 있는 데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전투의 참모습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주는 억지효과, 테러에 대한 대응의 유연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그것조차 톨스토이적인 우직한 비난을 받을까요.

이처럼 생명에 대한 둔한 감수성은 어느 의미에서 테러와 그에 대한 무력행사라는 폭력 응수보다도 심해서 견딜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핵과 생물·화학무기 등 악마와 같은 산물이 불쾌한 그림자를 드리우는 요즈음, 전쟁에서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기력, 정신력 등은 단역 중의 단역, 승자와 패자를 불문하고 그러한 인간적 요소<휴먼 팩터>가

끼어들 여지는 전무에 가깝습니다.

제크트가 느꼈던 ‘참을 수 없는 전쟁의 타락’은 최후의 종점까지 오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부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아프가니스탄 국내의 테러조직은 거의 일소된 듯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승리감이 인간의 미덕과 거의 관계가 먼, 보복의 성취가 가져온 정념의 불꽃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보복과 보복, 증오와 증오의 연쇄는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의 십계호구의 진수는 선(善)을 구현시키는 정신 투쟁에

저는 테러도 나쁘지만 보복전쟁도 좋지 않다는, 듣기는 좋지만 그다지 생산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싸움양성패론’(싸웠을 경우 그 시비를 불문하고 쌍방을 처벌함)을 제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위협은, 싸워야 할 상대방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빈곤, 무한한 증오 그리고 최강의 적, ‘인간부재’라는 현대의 악령이고, 칼 용이 “제로를 1만 번 더한다 해도 1도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저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성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현대라는 시대는 어리석게도 수적인 과소와 조직의 크기만을 생각하는 것밖에 모른다”라고 한탄한 정신병리 그 자체가 아닐까요.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해도 거기에서 구심점<원칙·기본>을 변경하면 수단이 목적으로 완전히 바뀌어 테러조직을 괴멸시키는 일이 전부인 듯한 착각을 초래하는 것을 저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사태가 일단락되었을 때 미국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紙) (12월 18일자)의 논설은 “승리의 퍼레이드는 아직 이르다”라며 “빈 라덴을 잡으면 된다는 생각은 빗나갔다. 잡아서 가장 깊은 동굴에 파묻어야 할 것은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실행한 사고방식이다”라고 논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점에 구심점을 정해 두지 않으면 군사적인 대응은 여지없이 무한대로 확대되어 자칫하면 ‘문명의 충돌’마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테러리즘은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하드 파워만으로 근절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도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발을 맞추어 대항해야 하는 넓은 범위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주의 재흥

그런데 땅에 쓰러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난다 – ‘인간부재’라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악령을 몰아내

고 ‘인간부흥’의 조류를 일으켜 가는 원천은 무엇보다 인간주의<휴머니즘>의 철리에서 구하는 이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주의만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만큼 손때가 많이 묻은 말도 없습니다. 사회주의적, 개인주의적, 실존주의적, 기독교적..., 실로 아주 많이 형용되어 있습니다.

그 내실들을 음미하는 일이 저의 임무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불교(佛敎)를 기조로 하는 ‘인간주의 = 중도주의’의 중층구조라고도 해야 할 의의, 그것이 현대의 어둠을 잘라 내는 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약간 고찰을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그 중층구조는 ‘인간주의 = 중도주의’의 내실을 이루는 생명관, 특히 그 기초이론인 십계론(十界論)과 십계호구론(十界互具論)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경애, 생명상태를 가장 낮은 단계인 지옥계(地獄界)에서 아귀계(餓鬼界), 축생계(畜生界), 수라계(修羅界), 인계(人界), 천계(天界), 성문계(聲聞界), 연각계(緣覺界), 보살계(菩薩界)로 순차적으로 올라가 불계(佛界)라는 최고의 생명상태에 도달하는 열 단계의 카테고리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 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이 십계론에서는 십계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 전부가 자기 속에 잠재적으로 십계를 내포하고 있다, 서로 구족 되어 있다고 설합니다.

즉, 지금은 지옥계가 나타나 있어도 다음 순간에는 지옥계에서 불계에 도달하는 모든 생명상태로 전환해 가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다른 계<생명상태>도 한 순간도 정지하지 않는 변화의 연속이다 – 이것이 십계호구론입니다.

강한 마음을 도약대로

십계론은 각각의 계<생명상태>가 단층적으로 분리독립하고 있는 정화(靜畵)의 한장면 한장면이라고 한다면, 십계호구론은 생명이 ‘잠재<명복>에서 현재(顯在, 현현(顯現))로’, ‘현재에서 잠재로’라는 동화(動畵)처럼 다이내믹하게 맥동치는 중층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필할 만한 것은 불교에 한하지 않고 이것은 동양사상 전반(全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십계론, 십계호구론이 생명을 객체화하고 지적인 분석과 조작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존 깊이에 있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 즉 ‘선하게 살아간다’라는 소크라테스적인 명제를 밀도 높게 띤 윤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은 닦으면 빛나고 닦지 않고 방치해 두면 금세 광택을 잃고 맙니다.

‘해이한 마음’에 지배되면 지옥, 아귀, 축생, 수라라는 악의 에너지에 농락당할 것이고, ‘강한 마음’이 견지되어 있으면 불계라는 선의 에너지를 현현할 수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마음’을 도약대로 정체와 현상의 고정화를 배제하고 다음 순간에 대비해서 자신을 다스리며 선의 에너지를 훈발시키는 내적인 투쟁, 긴장감이 불가결하게 됩니다. 그 투쟁을 지속하고 습관화함으로써 선의 에너지를 생명활동의 기초, 기저부에 놓는 영위(營爲)가 무엇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이 십계론, 십계호구의 대강입니다.

현실의 ‘정형화’가 낳은 20세기의 비극

마르티(무력혁명)와 간디(비폭력운동)는 혼의 깊숙한 곳에서 일치

석존의 중도주의(中道主義) ‘내면을 제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 의의가 담긴 과제

‘중도주의’의 사회이론적 전개

그러면 이 ‘인간주의=중도주의’를 사회이론적으로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점에 대해 4반세기 이전(1973년 7월)에 어느 학생들의 모임에서 간담형식으로 대화한 바가 있어 조금 길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 논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사회의 주의주장은 반드시 한정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라고 할 경우는 이미 그 속에 ‘사회화’와 대립하여 서로 용납하지 않는 한정성의 주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주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물론이라면 유심론을 배제하고, 유심론자는 그 유물론을 배제합니다. 예술분야의 주의주장이라 해도 이 한정성, 배제성은 항상 떠나지 않고 따라다닙니다.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회를 자기가 주장하는 틀에 맞춰 끼워 넣으려는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의 주의주장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틀에 끼우는’ 작용이 수반됩니다. 불법에 바탕을 둔 우리의 주장은 이 정형화라는 점에는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의 실질 파악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관찰해 가겠습니다.

이는 순응주의와 근본적으로 달라, 중도를 따른다는 말이며 그것은 개인이나 사회를 뭔가 특정한 형태에 묶어 두고 다듬어내려는 방식이 아닙니다. — 중략 —

그러므로 A와 B가 상반하고 있는 경우에도 A 안에도 B 안에도 들어가 다듬어 나간다 —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무원칙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방정식입니다.”

당시의 시대상황 속에서 나는 간담의 내용을 그대로 활자로 옮긴 관계로 설명이 조금 부족한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첫째 사항은 사상(事象)의 상대성, 가변성이라는 점입니다.

생명이 현재(顯在)와 잠재(潛在), 현현(顯現)과 명복(冥伏)을 되풀이하면서 유전하고 있듯이, 사회 사상(事象)에서도 현상면, 표층면을 보면 전부 상대적이며 가변적입니다. 제행무상(諸行無常) 성자필쇠(盛

者必衰)라 하여 ‘변함없는 것’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을 잘못 인식하고 ‘정형화’에 구애받을 경우, 예를 들면 20세기를 석권한 이데올로기의 경직화 상태에 빠져들고 맙니다.

‘정형화’의 함정을 극복하는 길

사회주의의 흥망은 지난 세기에 전개된 최대의 드라마였으며 한때는 빛나 보이던 자유주의만 해도 최근에는 약간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상대성, 가변성에 관한 좋은 교훈이며 ‘정형화’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의 실질을 파악하는’ 편에 중점을 두도록 호소하는 연유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데올로기와 유물론, 유심론에 한정되지 않고 선(善)과 악(惡), 행복과 불행, 전쟁과 평화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십계론(十界論)을 명찰(明察)한 바에 따르면, 지옥계라는 극악(極惡) 속에도 불계(佛界)라는 극선(極善)이 가능성으로 잠재<명복>하고 있듯이 화복(禍福)은 문자 그대로 ‘꼬인 새끼줄’처럼 전변(轉變)해 가는 가변적 현상입니다.

또 아무리 가혹한 전쟁 속에도 평화의 인(因)을 찾아내는 것은 가능하며 역으로 작금의 일본처럼 표면적으로는 언뜻 평화로운 듯이 보여도 평화와 안일의 구별도 가지 않는 그런 이완상태가 계속되면 언제 ‘근화일조(金花一朝: 덧없는 영화. 편집자주)의 꿈’으로 끝나 버릴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사물, 사회 사상(事象)의 상대성, 가변성을 간파해 가는 안목과 식견을 기르고, 세상의 움직임에 분동되지 않도록 자기를 다스리며 주체를 확립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시대와 상황의 실질 파악에 중점을 두고 거기부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관찰해 가겠다’고 기술한 것도 거기에 ‘인간주의=중도주의’를 특징짓는 중층구조의 진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안식(眼識)을 기르기 위해서는 십계론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변하는 현실에는 늘 기존의 말과 이데올로기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 그런 변화와 새로움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거울을 계속해서 닦는 힘든 작업을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다스리는 것에 따른 흔들리지 않는 주체 확립이며 그 부분을 광원(光源)으로 삼아 현상계를 역으로 조사(照射)해 볼 때, 사물과 현상의 참된 모습이 과부족 없이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져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작년에 한 제언에서 모리 아리마사의 인상 깊은 말을, 시대를 개척하는 핵심단어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아리마사의 말을 인용하면 “세계는 자기규율의 경쟁이다. 정치가 군사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다. 또 평화의 진정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사정은 개인의 경우이나 국가의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인품이 있듯이 나라에는 나라의 특질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자기규율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독자적인 ‘자기규율의 형태=품격’을 엿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는 한, 타인의 존중을 받지 못하며 더욱이 존경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점에 관련해서 석존에게 얽힌 흥미 진진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은 존엄하다고 말하지만 인간은 누구든 다른 생물을 희생시켜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어떤 생물은 죽여도 좋고 어떤 생물은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존은 “그것은 죽이는 마음을 죽이면 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말을 얼버무린 것도 아닐뿐더러 살짝 바꾼 것도 아닙니다. 착실하게 응하고자 했을 때는 용이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 스킨라적 번쇄(煩)철학의 미로에 들어가 버릴 질문에 대해 최상의, 올바른 오서독스(정통적인)한 답변입니다.

폭력이나 살생 등의 착종적(錯綜的: 여러 가지가 섞여 모임. 편집자주)인 사상(事象)은 수많은 위상을 가지고 있어 어떤 살생은 좋고 어떤 살생은 나쁘다는 일률적인 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죽이는 마음을 죽이는 것’, 외면적인 이비곡직(理非曲直)보다도 먼저 내면을 제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자기규율’의 마음이 확립되어 있으면 어떠한 미혹이나 준순(淪巡: 결단하여 단행하지 못함. 편집자주)도 극복하여 최선의 선택과 결단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 석존의 진의는 여기에 있습니다.

비티에르 박사와 대화

저는 작년, 쿠바의 석학 신티오 비티에르 박사와 ‘쿠바의 사도(使徒), 호세 마르티’를 둘러싼 대담집 《카리브의 태양 정의의 시(詩)》를 상재(上梓)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마르티를 간디로 가정해서 “마르티의 생애는 반드시 비폭력 일색(一色)으로 물들여져 있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정신성의 핵이 되는 부분은 훗날 마하트마 간디가 걸어온 길과 놀라울 정도로 근접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비티에르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티는 간디가 말한 ‘시민의 불복종’ 이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찌할 수 없는 혁명의 폭력(스스로 민족의 물질적, 정신적 승리를 순수하게 지키려는 폭력)에서 증오라는 본능을 제거하고자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신이여, 이는 정당한 전쟁이며 사람들을 해방할 수 있는, 아마도 중요하고 결정적이며 유일한 전쟁 – 증오에 대한 전쟁입니다’”라고.

억압에서 해방을 구하는 투쟁이 간디와 마르티 사이에서는 때때로 비폭력과 폭력이라는 대조적인 형태

를 나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외형은 달라도 증오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죽이는 마음을 죽인다’는 ‘자기규율’의 힘이라는 한 가지 점에서 거대한 두 혼(魂)은 강하게 공명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비티에르 박사와 함께 저는 현상면에서의 양자택일은 심층차원에서의 지양합일(止揚合一)에 뒷받침되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끈에 목이 졸려 이대로는 죽을 것만 같은 때에 끈이 저절로 풀릴 것 같지 않으면 그 끈을 잡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호세 마르티 선집 제3권》라고 말하는 마르티의 혁명관, 전쟁관은 악이나 폭력을 혁명의 ‘산파(産婆)’로서 적극적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런 이유에서 유혈(流血)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숙명이라 여기던 행동방식과 180도로 그 벡터(방향과 크기를 가지는 양. 편집자주)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벡터가 향하는 곳이, 마르티의 방법에서는 아무리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우여곡절을 거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평화와 인간의 존엄이라는 궤도로 다다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문명의 명맥은 ‘공존을 위한 의지’에 ‘차이’를 극복하는 인간외교를!

어떤 상대에게도 ‘대화의 실마리’가

셋째로 ‘인간주의=중도주의’는 생명을 파고 들어가 만인에게 공통하는 보편적 품성을 찾아내고 있는 까닭에 인간인 이상, 상대를 선택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옥계에도 보살계, 불계가 명복하고 있듯이 어떤 상황이든 상대방이 누구든 반드시 돌파구는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전(佛典)에 “자재(自在)란 무장애(無障礙)이며”(어서 736쪽)라고 있습니다. 그 투철한 무차별·평등의 생명관과 인간관은 인종이든, 계급이든, 민족이나 국적이든, 종교나 이데올로기, 젠더(사회적인 성차별<性差別>)든 이러한 외재적·타율적 요인으로 인간을 결정짓고 형식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A와 B가 상반하고 있는 경우에도 A 안에도 B 안에도 들어가 다듬어 나간다 –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라고 말한 것도 A, B 어느 쪽인가를 고른다는 것은 본래 차별이 없는 인간에게 차별을 갖게 하는 것이며 인간주의와 인간외교가 취해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인간주의=중도주의’를 후광으로 삼아 “나는 인간이다. 사람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휴머니즘의 모토는 한층 더 빛을 발해, 그 앞에 활연(豁然)히 열려 오는 것은 차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과 차별하지 않고 마음을 주고받아 가는 대화의 왕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해 왔습니다.

1974년 가을, 첫 소련방문을 앞두고 몇몇 사람들에게 ‘종교를 적대시하는 이데올로기의 나라에 왜 가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마디로 “인간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풍조가 격심했던 무렵의 일입니다.

그 소련방문은 첫 중국방문이 있던 지 수개월 후의 일이었지만 양국은 우수리 강을 끼고 무력충돌도 있어 긴장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체하지 않고 양국을 방문하여 수뇌와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분쟁이 계속되지는 않으리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 그 확신대로 되었습니다.

다양성이 숨쉬는 세계를 목표로

또 6년 전 쿠바를 첫 방문했을 때, 쿠바와 미국 사이에는 두터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모든 행사를 마친 뒤, 그 길로 쿠바에 건너가 카스트로 의장과 회견에 임한 바가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외교에 철저하면 넘지 못할 차이의 장벽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저의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문명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공존을 위한 의지다”라고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말했습니다.

이 ‘공존을 위한 의지’란, 차이를 존중하면서 더 나아가 차이를 초월해서 인간의 보편적 품질(稟質)을 공유하려는 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지를 관철해 가는 곳에 대화에 의한 절차탁마(切磋琢磨)가 초래하는 다양성이 숨쉬는 세계, 즉 ‘문명 간 대화’가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지구문명의 공동마져 전해져 오는 인간주의의 풍요로운 세계를 개척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마지 않습니다.

미국의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동시다발테러는 테러에 대항하는 국제적인 합의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식의 아유가 담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각국이 저마다 복잡한 국내사정과 남의 평판도 있어 합의가 어디까지 강고(強固)하며 영속적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테러와 투쟁하기 위해서는 일국(一國)만이 아니라 국제협조가 빠질 수 없다는 공통인식만은 얻을 수 있었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빅토리 오브 바이얼런스’ (폭력에 맞서 승리한다=미국SGI 청년부도 이 의식계발운동에 착수)의 지구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데까지 끌어 올려 가는가, 더욱이 그것을 음화(陰畫)에서 어떻게 지구문명이라는 양화(陽畫)의 방향으로 반전시켜 가는가는 21세기의 인류에게 부과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 왔습니다.

안전해 버린 ‘문명 간 대화’의 흐름을 본연의 모습으로 크게 궤도수정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키구치 초대회장의 전망 ‘인도적 경쟁’의 시대를 열어

자타가 함께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로

SGI는 ‘문명 간 대화’ ‘종교 간 대화’에 솔선

대립에서 협조의 방향으로 경쟁형식을 전환

이런 점에서 ‘자기규율의 경쟁’이라는 패러다임은 지극히 유효한 데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가학회의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郎) 초대회장이 100년 전(1903년)에 저술한 《인생지리학》에서 제창한 ‘인도적 경쟁’이란 바로 이 ‘자기규율의 경쟁’과 동의어며 시대를 앞선 선구적인 말이었습니다.

4년 전의 제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특필할 만한 것은 이 ‘인도적 경쟁’이 정치나 군사, 경제 등의 면에서 경쟁의 ‘단위’와 나란히 불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형식’ 그 자체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인도적 방식이라 해도 특별한 방법은 없다.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이든 인도적 범위 내에서 하는 데 있다. 요는 그 목적을 이기주의에만 두지 않고 자기와 더불어 타인의 생활도 보호하며 증진시키는 데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고 타인을 이익케 하면서 자기도 이익이 되는 방법을 택하는 데 있다. 공동생활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데 있다”라고.

‘공동생활을 의식적으로 행한다’ 함은 오르테가의 ‘공존을 위한 의지’라는 말보다 앞서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마키구치 회장은 군사면도 포함하여 정치, 경제 등 모든 레벨에서, 약육강식의 대립적 경쟁에서 공존공영의 협조적 경쟁으로 전환을 촉구하고 ‘자타 공히 행복’을 실현하는 지구사회와 지구문명 건설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문명끼리 접촉하는 것은, 토인비 박사가 “외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고통스러움과 동시에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만사가 거리낌없이 잘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돌이나 헬레이션(광선에 의해 사진이 흐려지는 현상. 편집자주)이 숙명적으로 부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박사가 섭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촉발, 촉매효과를 가져다준 사례는 너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말이 인간의 태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없으면 독선(獨善)의 어둠에 빠진다

그 점에 대해서 작년, 유엔에 ‘문명 간 대화의 해’를 제창한 이란의 하타미 대통령이 “어떤 주요 문명도 격리된 상태로는 발전하지 않았다”며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받은 문화와 문명만이 살아 남았다”라고 강조한 바에 주목할 만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말하는 측이 만들어 내고 발견하고 경험한 세계에 자신의 몸을 숨김없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듣는다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대화는 모두 실패의 길을 걷는 운명에 처합니다”라고.

저도 대화로 얻을 수 있는 결과 이상으로 대화의 과정 그 자체에 대화의 진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야말로 인간과 인간, 문명과 문명 간의 촉발작용이 활기차게 일어나는 장(場)이고 ‘자기규율의 경쟁’ ‘인도적 경쟁’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각국의 리더나 식자들과 대화를 거듭해 온 것도 ‘대화의 힘이야말로 세계를 하나로 뗌다’는 신조 때문이고, 대화를 통해 산적(山積)해 있는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아내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SGI에서도 또 세 곳의 연구기관(동양철학연구소, 보스턴21세기센터, 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에서도 의욕적으로 ‘문명 간 대화’나 ‘종교 간 대화’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두는 사상의 우열을 겨루는 그런 ‘의론(議論)을 위한 의론’이 아니라 분쟁방지나 빈곤 극복, 지구적인 환경파괴 방지를 위해 인류의 영지를 결집할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인간은 독선이라는 어둠 속을 계속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대화란 그 어둠 속에서 서로의 발 밑에 빛을 비추어서 걸어야 할 길을 찾아내는 횃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도 “서로 사귀며 주고받는 것이 원래 인류의 성격이다. 독보적이고 고립할 경우에는 그 재지(才智)가 발생할 리 없다. 가족이 서로 모이는 것도 아직 인간의 교제를 다함에 있어 부족하다. 세상이 서로 어우러지고 사람들이 서로 접하여 그 교제는 더욱 넓혀지고 그 법이 머지않아 갖추어짐에 따라 인정(人情)도 더욱 화합하고 지식도 더욱 깨우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명은 서로 촉발하는 곳에 성숙과 더불어 발전도 있으며 반대로 촉발을 거부하면 쇠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아무리 패권을 자랑하는 문명이라도 예외가 아님을 인류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금세기에 지구문명의 지평을 전망할 수 있는가 어떤가’ 하는 중대한 시련 속에 처한 지금, 이 ‘자기규율의 경쟁’ ‘인도적 경쟁’이라는 패러다임이야말로 그 성부(成否)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법에 따른 처벌을 합의

이상으로 동시다발테러가 초래한 위기를, 지구문명을 전망하는 합의를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해 가기 위한 정신면에서 그 대응을 고찰해 왔습니다만, 이후로는 그 법적, 제도적 측면에 몇 가지 접근법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테러방지를 위한 전제로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법에 따른 처벌’을 국제사회의 합의로 만드는 노력과 어떠한 테러도 공통 규칙으로 대응한다는 ‘보편성의 확립’입니다.

이번 영미(英美) 양국을 중심으로 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행동은 유엔에서도 “유엔헌장에 따른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自衛權)을 재확인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문맥으로 파악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만, 설령 그런 면이 있다고 해도 역시 군사행동에는 장래에 화근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테러 범죄그룹이 어떤 사상적 배경이나 정치적인 배경을 가질지라도 동등하게 법에 따라 처벌해 가는 보편적인 체제 만들기를 지향하는 일이 간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범인 그룹을 체포하고 구속하기 위해 최저한도의 무력을 수반하는 경찰행동이 요청되는 경우도 이런 보편적인 시스템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사태의 단계적 확대를 방지하는 데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국제법, 국제경찰, 국제사법제도의 정비를 도모하여 이들을 연계한 형태의 종합적인 시스템 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그 중핵을 담당하는 것은, 아난 사무총장이 테러근절을 위해 광범위하게 지속 가능한 전략을 입안하는 기관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엔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째로 국제법에 대해서는 ‘포괄적 테러방지조약’의 제정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재킹(공중, 해상 납치) 방지에 관련된 조약을 비롯하여 테러에 관한 12조약이 채택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모두 범행장소나 사용된 무기 등 범죄 형태에 따라 사후에 제정된 경위가 있고, 해마다 테러조직의 국제네트워크화(化)가 진척되어 그 수단도 교묘해지고 있는 현재로서는 테러를 종합적으로 단속할 조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조약은 중대범죄를 억지하고 방지하는 면에서 국제협력의 초석이 되는 의의가 있고 이제까지 서밋에서 호소해 온 바와 같이 더 많은 나라의 비준이 요청되어야만 합니다. 이 조약들에 맞춰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을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한 반(反)테러의 국제연대의 증거로서 ‘포괄적 테러방지조약’ 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유엔에 테러방지의 전문조직을

둘째로 범죄단속에 대해서는 전문 상설조직을 유엔에 설치해 ICPO(국제형사경찰기구)와 각국의 경찰당국과 긴밀하게 연계를 취하면서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국제네트워크의 핵으로서 그 기능을 하게 만들면 어떨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 범죄그룹을 단속하는 면에서 현지의 경찰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유엔의 독자적인 경찰력이라고 하는 구상을, 장래를 내다보며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유엔헌장 7장에 의거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조치나 자위권을 발동하기 전에 국제협력에 따른 경찰의 대응이라는 선택사항을 준비하는 것은 더욱더 보편적인 테러방지대책이라는 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지 않을까요.

국제형사재판소, 포괄적 테러방지조약

테러대책은 유엔 중심으로

일본은 아프가니스탄 부흥의 견인력으로!

‘증오의 연쇄’를 단절하기 위해

셋째로 국제사법제도 정비라는 면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를 하루 속히 설치하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제노사이드(집단살해)나 인도(人道)에 대한 죄, 전쟁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재판하기 위한 국제적인 상설재판소를 설치하는 조약은 1998년에 채택되었습니다만, 아직 발효요건인 60국의 비준을 받지 못하여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관을 통해 ‘힘에 의한 해결’이 아니라 ‘법에 따른 해결’을 제도화하고 ‘증오와 보복의 연쇄’를 끊는 회로를 여는 것이 중요하며, 거기에 20세기와 21세기를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찍이 조기 설치를 계속 호소해 왔습니다.

현재 ‘국제형사재판소를 요청하는 NGO(비정부기구)연합’ 등에 의해 비준 촉진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SGI로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고자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하기까지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舊)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 일어난 학살과 같은 범죄를 재판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설치된 것과 마찬가지로 형태로 국제임시법원을 설치하는 면에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테러를 국제사법제도에 따라 재판하는 그런 원칙 확립을 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전망으로 '부흥을 위한 지원'을

이러한 테러방지의 틀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아프가니스탄의 부흥을 위해 완수해야 할 일본의 역할에 대해 언급해 두고자 합니다.

지난달, 잠정 정권이 발족한 아프가니스탄은 23년에 걸쳐 내전이 계속된 결과, 이제는 무려 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난민상태에 처해 사람들의 생활이나 사회를 지지하는 인프라(기반)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조급한 인도적 지원과 부흥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국제사회에 요청되고 있기에 일본은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년에 '유라시아 외교'나 '실크로드 외교'를 모색해 온 일본은 테러사건 이전부터 북부동맹과 탈레반, 이 두 파(派)를 도쿄에 초청하는 등, 평화의 실마리를 찾는 외교노력을 시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 지역에서 행한 식민지 지배나 침략행위와 같은, 군사·외교 면에서 역사적인 '부(負)의 유산'이 없이 아프가니스탄에 인접하는 중앙아시아의 나라들과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여러 가지 형태로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온 이외에 지난번(1월 21일 ~22일)에도 '아프가니스탄의 부흥을 위해 지원하는 국제회의'의 각료급 회합을 도쿄에서 개최하여 부흥계획의 개요를 매듭짓는 데에 진력하는 등, 의욕적인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일본이 장기적인 전망에 서서 인내력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부흥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난민의 세기(世紀)'라고도 불리는 20세기 비극의 주요원인이 되어 온 지역분쟁이나 민족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책과 부흥을 위한 지원의 본연의 자세를 모색해 가야 할 것입니다.

유엔의 '평화건설'에 관한 구상

근년의 분쟁은 전투와 난민, 기아와 자연파괴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긴급사태'의 양상을 띠고

있어 다각적인 대처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의 '평화건설' 구상에 일본이 참획(參劃)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분쟁에 따른 파괴 상태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사회가 안정된 평화의 기반을 자력으로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그 내용은 민족화해, 인권존중으로 무장세력의 무장해제와 사회복귀, 법질서 확립, 민주적 제도 증진, 기본적인 인프라 정비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중앙아프리카 등에 실험적인 형태로 '평화 건설지원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의 귀환과 재정주화(再定住化)를 위한 '아즈라 계획' 등에 착수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유엔의 모든 기관과 협력하면서 현지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각종의 전문기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파견하는 것을 상시(常時)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확립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초점이 되고 있는 지뢰 제거에 대해서도 일본은 기술협력 등을 통해 공헌할 수 있는 면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아프가니스탄의 심각한 상황이 오래도록 국제사회에서 방치되어 온 교훈에 입각하여 평화, 부흥의 진척상황을 순차적으로 홍보함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문화나 전통 등을 소개해 가는 '아프가니스탄 평화센터'를 일본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테러방지는 '인간의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빈곤 근축에 대한 대처가 급선무

유엔 '평화를 위한 인권교육의 10년'을

이상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 만들기와 분쟁 후의 평화건설에 대해 논했습니다만, 이들 '사후적 대처'와 함께 요청되는 것은 '예방적인 대처'— 즉 테러나 분쟁을 없애기 위한 환경 만들기를 세계가 협력해 추진하는 일입니다.

우선 '예방적인 대처'에 국제사회가 전력을 다한다 해도 테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처벌'을 원칙으로 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준하는 보편적 규칙으로 대응한다는 두 단계 태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년간에 걸쳐, 시대는 '인간의 안전보장'에 입각한 국제협력의 틀을 구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그 관점에서 ‘인권’ ‘빈곤’ ‘군축’이라는 이 세 가지 기둥에서 비롯되는 예방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인종차별, 배외주의에서 탈각을

첫째로 ‘인권’입니다만, 특히 저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측면의 예방적인 대처로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주의,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기타 불관용 철폐운동의 해’였으며 남아프리카의 더반에서 세계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것에 앞서 NGO(비정부기구)의 포럼도 개최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참가한 SGI 대표단을 통해 저는 유엔 ‘인권교육을 위한 10년’(1995~2004년)에 이어 유엔 ‘평화를 위한 인권교육 10년’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더반 선언에서 호소한 ‘모든 사람이 공존하고 평등·공정·인권·안전이 함께 받아들여지는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영속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열쇠는 이 인권교육의 착실한 실현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인간도 태어날 때부터 배타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편견과 차별감정 등이 심어져 다른 집단에 대한 증오가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서서 SGI에서는 지금까지 유엔의 ‘인권교육을 위한 10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형태로 ‘현대세계 인권전(展)’ 순회를 비롯해 인권세미나 개최 등 의식계발 활동에 계속 힘써 왔습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특히 어린이들의 교육적 측면을 중시해 세계 120국·지역의 그림동화를 소개하는 ‘세계 그림동화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동화전시회는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와 생활을 알기 쉽게 소개하면서 서로의 다른 점을 다양성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가는 기회도 됩니다.

일상생활의 갖가지 장면에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길러가며 현실의 행동으로 옮겨가는 반복 속에 ‘인간문화 창조’의 직도(直道)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빈곤 타파’를 위한 협력이 불가결

둘째는 ‘빈곤 타파’를 위한 노력입니다. 실로 ‘빈곤’이야말로 테러나 분쟁을 낳는 큰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글로벌화 속에서 커져 가는 빈곤 격차의 시정(是正)과 절대적 빈곤층을 없애기 위한 국제협력을 거듭 호소해 왔습니다. 빈곤은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의 존엄을 위협하고 있는 ‘간과할 수 없는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제언에서도 부채가 많은 빈곤국에 대한 구제조치로, 이용 가능한 자금을 빈곤 완화나 교육·보건·의료 등의 환경정비에 충당시키는 일 등을 지구적 규모로 지향해 가는 ‘글로벌 마셜계획’의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의 ‘2001년 세계어린이백서’에서는 부채구제의 배당을 어린이들의 교육이나 건강을 위한 자금으로 전용한 우간다의 예를 소개하고, “부채를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빈곤을 종식시키는 열쇠가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인간 본위의 시점에 입각한 빈곤타파의 노력을 일치 단결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제3회 ‘유엔 후발개발도상국회의’가 열려 빈곤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침이 담긴 행동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7월 제네바·서밋 선언에서도 개발도상국 지원에 최대의 초점이 모아지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밀레니엄 선언의 ‘2015년까지 하루 소득이 1달러 이하인 인구의 비율을 반감한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지금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특히 유엔의 ‘인간의 안전보장기금’⁴ 설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온 일본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유엔의 기구면에서도 아난 사무총장이 제안하고 있듯이 세계 모든 극빈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담당하는 고등대표사무소 설치 등도 검토해 가야 하겠습니다.

제네바군축회의를 운영개혁

셋째는 분쟁악화의 제도적 예방이라는 측면의 ‘군축 추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테러와 관련하여 걱정되는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라는 대량 파괴 무기의 확산방지 체제의 확립과 철저한 군축노력이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⁴ 인간의 안전보장기금

1999년 3월, 유엔에 설치된 기금. 빈곤과 환경문제, 난민유출 등 국경을 초월한 범위를 가진 ‘인간의 생명이나 존엄에 대한 위협’에 대해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돌파구를 열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제가 강하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CD (제네바군축회의)’의 운영개혁입니다.

1960년에 설치된 ‘10국 군축위원회’를 모체로 하는 CD는 그 후 명칭과 조직적인 변화를 거치며 유일한 다수국가 간 군축교섭기관으로서 ‘핵확산금지조약’ ‘생물독극물 무기금지협약’ ‘화학무기금지조약’ 등 수많은 중요한 군축조약의 성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6년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이래 5년간에 걸쳐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새로운 교섭 테마마저도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태타개를 위해 CD의 최대 특징이며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최대의 원인이 된 ‘만장일치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검토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일본이 “수속 사항은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는 일부 다수결방식의 도입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수결이 안전보장 문제에 걸맞지 않는다면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채용하고 있는 ‘컨센서스 마이너스 원’제도(당사자를 뺀 나머지 모든 가맹국에서 일치를 보았을 경우는 그 의사를 존중)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도 운영개혁을 하지 않으면 CD는 그 존재의 의의조차 위태로워질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첫 시작부터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선 교섭 테마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얻은 후에 논의를 진행시켜 세부적인 내용을 메워 간다는 운영방법으로 전환하는 일이 생산적이지 않겠습니까?

CD의 전통을 전체적으로 전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론(異論)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군축 추진을 근본적 의의로 생각하여 개혁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핵테러방지조약 조기체결을 지향하라

이 군축이라는 면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핵군축에 대한 노력입니다.

9·11 테러 이래 퍼그워시회의의 로트블라트 박사를 비롯해 ‘테러리스트의 핵무기사용’을 염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핵물질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고 핵시설 파괴공작에 대한 확실한 방어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유엔에서는 현재 ‘핵테러방지조약’이 심의되고 있습니다만, 조기 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제여론을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테러뿐 아니라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핵군축을 진전시키는 일은 21세기의 인류에게 사활이 걸린 과제입니다.

지난해 12월, 미·러 양국은 START I (제1차 전략무기감축협정)에 준하여 전략핵탄두를 6천 발로 감소시키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핵군축의 구체적인 스케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2000년의 ‘핵확산금지조약’ 제6회 재검토회의에서는 ‘전면철폐를 위한 핵보유국의 명확한 약속’이라는 문구를 담은 최종문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조치나 기한 설정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한 합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핵무기 ‘전면철폐를 위한 명확한 약속’을 핵보유국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은 비보유 7국이 주도하는 ‘신 아젠다연합’과 이것을 지원하는 NGO운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이 흐름을 후퇴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민중여론의 포위망’을 더욱 단단히 하고 핵보유국에게 성실한 약속 이행을 다그칠 필요가 있습니다.

SGI에서는 지금까지 생명론의 차원에서 핵무기를 ‘절대악’이라고 지탄한 도다 조세이(戶田城聖) 2대회장의 ‘원수폭금지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핵위협전’의 세계 순회나 ‘애블리션 2000’운동에 대한 협력 등을 계속해 핵철폐를 바라는 민중의 연대를 넓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핵무기전면금지조약’ 제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더욱 행동을 거듭해 갈 소견입니다.

‘대인지뢰’를 지구상에서 철폐

이 핵무기 문제와 함께 언급해 두고자 하는 것이 ‘대인지뢰’ 문제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분쟁으로 부각되었듯이 많은 일반 민중, 특히 어린이들의 희생을 낳고 있는 비인도적 무기의 철폐는 냉전 후 세계의 초점이 되고 있어 저도 1997년 제언에서 전면금지조약의 제정을 호소하였습니다.

ICBL(국제지뢰금지운동) 등 NGO의 적극적인 활동도 있어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은 1999년에 발효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세계에 1억1천만 개의 지뢰가 매설되고 2억5천만 개나 되는 지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무기의 가장 큰 문제는 분쟁 중만이 아니라 분쟁이 끝난 후에도 매설된 지뢰로 인해 일상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약의 발효 이후 지뢰나 불발탄으로 인한 희생자가 나온 나라의 반수 이상이 전쟁상태가 아닌 나라였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이 조약은 사용뿐 아니라 저장·생산·이양도 금지하여 철폐를 의무화한 획기적인 조약입니다만, 모든 나라가 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뢰에 따른 희생자를 근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는 21세기에 ‘전쟁 없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국제사회가 일치 단결하여 이 비인도

적인 무기의 완전폐기, 특히 거기에 이르는 단계로서 수출금지를 조급히 실현해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뢰제거와 희생자지원을 위한 협력체제를 만들어 내는 일이 ‘인도의 세기’로 만들어 가는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엔환경고등판무관 지구녹화기금 창설을

리우 ‘지구서밋’이 열린 지 10년

계속해서 21세기의 지구사회를 생각할 때 피해 갈 수 없는 ‘환경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서밋’이 열린 지 10주년에 해당하며 8월에 남아프리카에서 ‘WSSD(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992년 냉전 종결과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속에서 열린 지구서밋은 183국·지역의 대표가 참가한, 전에 없던 규모의 회의로 기후변화협약이나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의 서명과 행동계획 ‘아젠다 21’의 채택이라는 많은 성과를 거둔 회의였습니다.

갈리 전 유엔사무총장이 ‘인식론적 전환’이라 평했을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 대책은 지지 부진하여 지구환경 악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예로 들어보아도 조약채택에서 9년 후인 지난 해 11월에 겨우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로 규정한 ‘교토의정서’⁵의 운용규칙을 합의한 데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 의미에서 올해 열리는 WSSD는 ‘인식론적 전환’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행동적 전환’을 이루는 기회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의에서는 과거 10년간에 걸친 대책의 진척상황이 검정됩니다만, 다시 한 번 새로운 결의와 강한 각오를 갖고 발본적인 대책을 세워 미래의 인류를 위해 행동을 개시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⁵ 교토의정서

1997년에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문서. 선진국에 온실가스의 감축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한 것으로 그 운용 규칙이 지난해 제7회 총회에서 최종 합의를 보았다. 미국과 개발도상국의 참가가 향후의 과제가 되고 있다.

모든 환경조약의 사무국 통합을

그래서 저는 국제협력의 틀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WSSD에서 ① ‘유엔환경고등판무관’과 사무소 신설 ② 모든 환경조약 사무국의 단계적인 통합화와 그것에 따른 ‘지구녹화기금’ 설치 ③ ‘재생가능 에너지 촉진 조약’의 체결, 이 3가지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은 기구개혁에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유엔에서는 UNEP(국제연합환경계획) 이외에도 UNDP(국제연합개발계획)나 WHO(세계보건기구) 등 수많은 기관이 환경관련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기구가 개별적으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현상이라 종합적인 계획을 구축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거나 연대 강화를 도모하는 일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분야에는 인권고등판무관이, 난민분야에는 난민고등판무관이 있듯이 환경분야에도 직책과 사무소를 신설해 모든 관계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며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강한 주도권을 발휘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환경고등판무관’에게는 사무차장급의 권한을 주어 필요에 응하여 국제적인 권고를 행하거나 현인(賢人)회의나 과학자회의 등을 소집해 미래의 전망을 발표하는 등,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를 리드하는 역할을 부여하면 어떻겠습니까?

둘째 안은 모든 환경조약의 사무국이 개별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해소함으로써 상호 활동의 연대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사무작업의 합리화를 통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조약가맹국이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잉여자금을 자본으로 하여 생태계 보호와 삼림(森林)을 새롭게 늘리기 위한 식목사업 등에 활용하는 ‘지구녹화기금’으로 활용해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GI에서도 브라질SGI의 ‘아마존 자연환경 연구센터’에서 열대 우림 재생연구프로젝트를 해 온 실적이 있어 그러한 환경문제 해결에, 될 수 있는 한 협력해 가고자 합니다.

5월 유엔어린이 특별총회에서 ‘어린이 최우선’ 원칙을 맹세

세계교육헌장 의 채택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 도입을

셋째 안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적극 도입을 도모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사회시스템을 전환할 길을 열기 위한 제안입니다.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온 UNEP (국제연합환경계획)에서는 ‘태양열, 풍력, 조력 등 환경에 무해한 에너지 도입이 새 천년에 인류가 힘써 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정하고, 지난해 3월에 ‘당연한 선택-재사용 가능한 에너지 기술과 정책’이란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선진국 사이에서도 그러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2000년 규슈·오키나와 서밋을 계기로 ‘G8 재생 가능한 에너지 태스크 포스’가 발족해 지난해 제네바 서밋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한 G8 공동선언에서는 ‘장래의 유산’이란 장에 “우리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 자국의 계획에서 충분히 고려될 것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른 나라들도 같은 행동을 취할 것을 장려한다”라고 명기하여 서밋 선언으로서 처음으로 그 추진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9월에는 EU(유럽연합)가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한 지령을 채택해 2010년까지 총에너지 소비량에 차지하는 비율을 배로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UNDP가 ‘지속 가능한 농촌 에너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방글라데시의 자그마한 촌락에 태양열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개발도상국에 한하지 않고 이러한 노력을 전 지구적 규모로 추진하기 위한 합의, 즉 ‘재생 가능한 에너지 촉진 조약’과 같은 것을 WSSD에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구헌장을 채택

WSSD에 관련해 다시 한 번 언급해 두고자 하는 것이 ‘지구헌장’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가치와 원칙을 명기한 ‘지구헌장’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과 지구 서밋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모리스 스트롱 씨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구헌장위원회에서 기초(起草)를 추진해 왔으며 2000년 6월에 최종초안이 발표되어 올해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SGI에서는 그 취지에 찬동하여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지원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이외에도 평화 연구기관인 ‘보스턴21세기센터’에서 초안 만들기에 다각적인 시점을 제공하기 위해 심포지엄 등을 열어 연구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지구헌장’에는 환경문제뿐 아니라 공정한 사회와 경제, 민주주의, 비폭력과 평화에 관한 항목 등, 앞으

로 글로벌 거버넌스(지구사회의 운영)를 생각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포괄적인 행동 규범이 포함되어 있어 21세기 인류의 지침이 될 헌장입니다.

공통된 전망을 갖고 그 곳을 향해 모두가 행동해 가는 노력 없이는 지구의 희망찬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국제사회의 일치된 합의로 ‘지구헌장’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택된 후에도 ‘지구헌장’이 인류 공동투쟁의 기축이 되도록 민간차원의 끈기 있는 의식계발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SGI로서도 지구헌장위원회나 다른 단체와 협력하면서 ‘지구헌장’을 각 국어로 번역하거나 그 내용과 취지를 각 국어로 해설한 핸드북과 비디오 제작 등의 지원에 힘써 가고자 합니다.

또 환경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지구헌장 메시지를 쉽게 친숙해지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표현한 팸플릿 제작도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WSSD에 대한 어린이들의 포스터와 작문 대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구의 미래를 맡아 갈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환경교육에 힘써 갈 것을 국제사회의 합의로 해 가야만 합니다.

SGI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환경교육 보급에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혼란한 세계의 희생자는 어린이

이와 아울러 올해 5월에 열릴 ‘유엔 어린이특별총회’에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해 두고자 합니다.

이 총회는 1990년 ‘어린이를 위한 세계서밋’에서 합의된 목표의 달성 정도를 검토해 보고 21세기 새로운 행동계획을 정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지난해 9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테러사건으로 여지없이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혼란한 세계 속에서 항상 희생이 되는 것은 어린이들입니다.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지구상에 21억이나 있습니다만, 그 건강이나 성장을 나라에서 보호받으며 살고 있는 수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세계서밋’ 이후 10년간 예방 가능한 병으로 사망하는 어린이 수는 크게 감소하고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 수도 증가하는 등 일정한 진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밋의 행동계획은 국제적으로 폭넓게 인지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어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세계적 연대’라는 네트워크를 세워 정부뿐만 아니라 NGO나 교육기관, 보도기관 등의 참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엔 어린이특별총회’도 그 일환으로서 열리는 것이며 유니세프의 벨러미 사무국장은 “오늘의 건강한 어린이가 내일의 건강한 세계를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는 일이 어린이특별총회의 목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SGI에서는 지금까지 ‘어린이의 인권과 현실전’을 비롯해 유니세프를 지원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 전시는 유니세프 창설 50주년을 기념해 1996년 6월에 개막된 이래, 미국의 각 도시와 남아프리카 등을 순회하는 전시로서 5월의 특별총회에 연동하는 형태로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의정서에 비준을

저는 이번 특별총회에서 각국 리더들이 모든 분야에서 ‘어린이 제일’ ‘어린이 최우선’ 원칙을 관철할 것을 서약해, 특별총회를 ‘어린이들을 위한 동맹’을 넓혀 가는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으로 어린이들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는 어린이 인신매매나 어린이 병사(兵士)를 금지한 ‘어린이 권리조약’에 명기된 ‘두 가지 선택의정서’⁶를 각국이 비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총회에서나 또는 가까운 장래에 ‘세계교육헌장’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문자교육이나 초등교육과 같은 기초교육을 모든 나라에서 추진하기 위한 ‘만인을 위한 교육 세계선언’⁷이 존재해 왔습니다.

⁶ 두 가지 선택의정서

2000년 5월에 유엔에서 채택된 ‘어린이 매매, 어린이 매춘 및 어린이 포르노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무력분쟁에 있어 어린이의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말한다. 이미 각각 10나라에서 비준하여 전자는 1월 18일에 발효, 후자는 2월에 발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⁷ 만인을 위한 교육세계선언

1990년,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유니세프가 주최하여 타이에서 열린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1억 이상의 어린이들이 초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기초교육의 완전보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것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교육환경의 정비를 위한 국제협력과 함께 21세기의 교육을 전망하여 ‘어린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을 위한 사회’란 이념을 기둥으로 하면서 세계시민교육, 평화교육을 지구적 규모로 실시하기 위한 공통규범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항구평화를 위해 청년교류 여성교류와 역사의 공동연구 추진을

올해는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

마지막으로 21세기 아시아의 평화를 전망하고 두 가지 제안을 해 두고자 합니다.

올해는 동북아시아의 3국인 한국, 중국, 일본에게 의의 깊은 해에 해당합니다. 중일국교정상화 30주년이며 한중국교정상화 10주년이고 한일공동개최로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린다는 세 가지의 의의를 담아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로 정해졌습니다.

3국의 신뢰양성의 노력은 1999년에 필리핀에서 열린 ‘ASEAN(동남아시아제국연합)+3’회의에 참석한 3국의 수뇌회담을 계기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2000년에는 수뇌회담의 정례화가 결정되었고 지난해에는 외무장관 회의와 경제관계각료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것에 합의하는 등 대화의 장이 정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국민교류의 해로 정한 것도 이러한 대화 속에서 결정된 것이며 신뢰와 우호의 연대를 깊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가학회에서는 아시아의 평화를 바라며 중국이나 한국과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해왔습니다.

올해도 주부(中部)청년부의 기획으로 중일우호의 초석을 세운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의 생애를 소개하는 ‘위대한 지도자 저우언라이전’이 지난 1월에 나고야를 시작으로 연내에 총 8지역을 순회하며 전시될 예정입니다.

또 저는 현재 한국 제주대학교 조문부 전 총장과 대담을 연재하며 한일우호의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평화의 문화와 여성전’을 개최

저는 아시아의 평화는 어느 한 나라가 리더십을 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우호를 쌓아 그 연대를 겹겹으로 넓히면서 시간을 들여 형성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교류의 해인 올해에는 ‘한중일 영리더스 교류 프로그램’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교류를 아시아 전체로 넓히고 정착시켜 차대를 젊어질 청년,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우정의 연대를 맺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열리는 ‘ASEAN+3’ 회의에 병행하는 것으로서, 개최지에서 교류행사를 열면서 서로의 문화나 역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수뇌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여성들의 솔직한 소리를 각국의 리더에게 전해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가학회에서도 올해 ‘평화의 문화와 여성전’을 각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이러한 기회에 맞추어 아시아 각국의 여성과 교류를 심화해 가고자 합니다.

공통된 역사인식의 토대를 만든다

또 한 가지 제안은 아시아에 있어 공통된 역사인식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공동연구 추진입니다.

지난해도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문제가 일어났습니다만, 과거의 역사인식이 이웃 나라들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경우가 80년대 이후 몇 번이나 거듭되어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교적인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교육이 어린이들에게 주는 영향의 크기를 생각해 볼 때 우려해야 할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역사학자인 에릭 홉스봄 씨는 일부 역사를 “인간의 가장 넓은 콘텍스트(문맥)에서 잘라 버릴” 위험성을 강하게 경계하고 “역사가는 아무리 작은 세계를 보더라도 보편성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나 세계대전의 무대가 된 유럽에서는 역사교육을 둘러싼 양국 간 대화나 다국 간의 대화가 여러 형태로 시도되고 있으며 1992년에는 12국의 역사가가 중심이 되어 편찬한 《유럽의 역사》도 발간됐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찬부양론이 있는 듯 합니다만, 대화나 협의를 통해 자국중심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역사인식의 본연의 자세를 추구하려고 한 의의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과거를 바라보는 일은 진지하게 미래와 마주보는 일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화’를 축으로 하여 공통된 역사인식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쌓아 가는 일은 아시아의 평화를 전망하는 데에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대화 확대’를 구호로 전진!

아시아의 평화에만 국한하지 않는 ‘자기규율의 경쟁’ ‘인도적 경쟁’에 뿌리내린 ‘대화’ ‘신뢰’ ‘협조’야말로 21세기의 지구사회, 지구문명의 구축을 위한 기축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키구치(牧口) 초대회장은 《창가교육학체계》 속에서 ‘수력(受力) 생활—의타적 생활’도 ‘자력(自力) 생활—독립적 생활’도 아닌 ‘수력(授力) 생활—공헌적 생활’로 인간의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력(授力)이란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엠퍼워먼트(힘을 부여하는 일)’가 됩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며 자타 모두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창조의 ‘공헌적 생활’을 한사람 한사람이 실천해 가는 일이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켜 시대를 움직입니다.

우리 SGI는 올해도 ‘대화 확대’를 구호로 행동하며 어디까지나 ‘평화’와 ‘공생’의 인간주의 연대를 넓혀가고자 합니다.